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성 바로알기

흐남 문화

법과 질서



조만형

유죄 추정의 올라미 걷어내라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채산당 입산부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경우 많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여론, 언론 보도, 경찰대응 등에서 얼마나 심한 실효 현상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채산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분노의 비등점을 찍는가 싶더니 CCTV 확인 후에는 세심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하루아침에 입산부는 허언증에 걸린 약질 순남으로 되고 말았다.

경찰측이 사실관계는 여전히 조사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대한 접근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데도 이미 낙인찍힌 입산부의 불명예와 수치심을 치유해 주기 위한 노력이 네티즌들과 언론은 물론 수사기관의 관심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다.

이러한 사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중세 시대 마녀사냥이나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재판처럼 비합리적인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듯한 사건 하나 생기면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에 더하여 오늘날은 SNS를 통한 불특정 다수인들까지 공동하여 미필적 고의로 사람 하나 간판

히 매장시키는 형국인 셈이다. 일단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난 후, 우리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다음에 비로소 사건의 진위가 가려져 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사회는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난 후에 지우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니 말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해서는 토를 달 이유가 없다.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먼저, 사실의 확정 단계에서 온갖 구실이 난무하여 사건의 실제 형성에 관한 왜곡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미 인격적으로 단신창이가 되어버린 사건의 당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으로 기소되어서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단계의 당사자는 유죄 확정받은 자에 버금가는 사회적 관심(?)을 어떠한 환경도 하지 못한 채로 묵묵히 받아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도 결국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흔히 기소된 후 재판단계에서 무죄가 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인지만, 만약 우리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렇게 한가롭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배려심'이었는데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듯이 왜 남의 행위에 대해서 관대한 법의 배려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것인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는 그러한 색안경을 끼지 말고 구체적인 사건을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즉 헌법은 제27조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제기가 된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이 인정된다면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형사피의자에게는 더욱더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전 국민의 인권을 위한 일반원칙인 셈이다. 범죄혐의에 관하여 명백한 입증이 있을 때까지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法廷)에 따라 무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열 사람의 죄지는 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적 명제를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른바 '웃 보비 사건'과 '나라 종금 사건' 그리고 '현대비자금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이 세 번의 사건 때문에 '336일'을 구급당했던 A도 국회의원이 세 번째 무죄 확정판결 직후인 2005년 5월에 했던 말이 필자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

"나는 세 번 죽임을 당했다. 검찰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나의 결백과 억울함을 그토록 호소했음에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금, 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상을 받아야 하나.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추궁을 해야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겠나. 이렇게 오래반쯤 갖밧혀버린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아물지 않는 상처는 남는 것... 다시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모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서 사회통합의 역할을 키워야 하겠다. <중신대학교수·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윤빈호

'자기 비움'의 신비

시고, 죽으시고 물하심으로서 '자기 비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기 비움'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자기 비움'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표도 '빈무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빈무덤 사건은 제자들 편에서 보면,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가슴 아파할 겨를도 없이 스승의 시신도 찾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허탈함으로 내몰았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의 시신까지도 철저히 비움으로서 더 이상 육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밀알 하나(예수님)가 죽어 많은 열매(모든 인간의 구원)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신비는 이렇게 자기를 비움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비움'의 신비 아닌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는 이런 '자기 비움'의 신비를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도의 마더 테레사는 바로 이런 '자기 비움'을 실천했지요. 마더 테레사가 빈민굴에 들어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줄 때 그녀의 수종에는 단돈 5루피(약 120원)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나환자, 노숙자, 길에 버려진 핏덩이 등을 거두어 들

기고



박득서

2015 광주 U대회 대동정신으로 준비하자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광주는 U대회 개최를 위해 쏟은 열정과 합성을 성공적인 대회 준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선수촌 건립과 경기장 확충, 교통·숙박 대책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는 전세계 대학생들을 초대하기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이번 대회를 시민들의 자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경기장 등 건물신축을 최소화한 것이 그것이다. 대신 기존 시설과 전담 등 광주 인근 도시의 체육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이는 모두 대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대학생 글로벌 리포터'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광주 U대회의 특색있는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2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 U대회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결코 눈앞의 소소한 문제들 갈등을 야기하거나, 대회 개최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는 대회성공 개최의 필요 충분조건이다. U대회의 주역은 광주의 대학생들이지만, 그들이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들과 기쁨을 나누고 교류하는 화합·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전세계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인의 도시 광주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대회 준비 단계부터 민·관·정이 소통하고 먼저 나서서 '以身作則(이신작적·출신수범)'의 정신이 확실하다. <광주 U대회 지원본부 경기시설과장>

농산물값 조금 올랐다고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가서야

요즘 물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물가 얘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킨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물가에 따라 무척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고자 한다. 무 한 개, 배추 한 포기 비싸봤자 1~2천 원이다. 그런데 고작 몇천 원짜리 농산물 가격이 몇백 원 오른 것 가지고 물가인상을 부

채질하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아주 큰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도시에서 흔히 먹는 커피도 한잔에 4~5천원씩하고 비싼곳은 만원씩도 받는다. 만원이면 1000원짜리 호박이 10개다. 이 10개의 호박으로 호박볶음을 하면 4~6명의 한끼 식사 반찬이 가능하다. 농산물이 올라봤자 품목당 몇 십원, 몇백

원이지만 공산품과 도시 서비스업은 단박에 몇만 원, 몇십 만원씩 오른다. 즉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데 괜히 장바구니 물가라는 이유만으로 농산물만 물가상승 주범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나마 현재의 농산물값 상승은 이상이므로 작용이 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단순히 농산물값 등락폭만 가지고 물가인상을 부추킨다고 하면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어버린다. 더욱이 이런 언론 보도는 농산물값 상승이 농민들만 이익을 본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다소 올랐더라도 작

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가 소득은 감소해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언론사에서는 농산물값 보도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심본 이해해 주고 정부 역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것을 요망 드린다. 지금 계산 값은 생산비도 못 건질 판이고 쌀값도 곤두박질이라 심지어 국회의원이 나서서 쌀을 사료용으로 쓰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시설

3차 발사 앞둔 나로호 성공 준비에 만전을

오는 10월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둔 나로호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의 인공 위성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모두 외국 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지난 2차례 발사에서 실패,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3차 발사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로호가 이번엔 성공을 거둘 경우 우리 발사체로 쏘아올린 최초의 위성이 라는데 그만큼 의미가 크다. 나로호는 우주선전진 크데일에 합류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다. 160여 국내 기업이 발사체 제작에 참여한 것도 산학협력을 통한 첨단기술개발이란 관점에서 고무적이다. 1, 2차 발사에 실패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사를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로호 발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발사 시기가 비 용에 얽매어 질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이번엔야말로 완벽한 준비로 성공 발사를 일궈내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 무상보육사업 지자체에 떠넘겨서야

갓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이 출발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무상보육의 한 중 심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부 정책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며 무상보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협의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이 선택적 복지나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모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올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영유아 무상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 원씩 지급된다. 재원은 정부가 3천69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체 무상보육 사업비 가운데 50%를 국고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 예산으

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형편상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막막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사회복지비 등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예산 중 복지비 부담률이 20%선까지 높아져 허리가 휘 지경이다. 특히 지방재정이 전국 꼴찌인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최고 50% 이상 부담하는 곳도 많아 보육비마저 분담할 경우 파국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무상보육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시행에 들어간 무상보육이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고, '보육데탕'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무상보육이 파행을 빚게 되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전 협의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급부터라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국고 보조 확대 등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가길 당부한다.

無等鼓

사법시험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시의 최고봉이었다. 행정·외무고시와 함께 3대 고시 가운데 하나지만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쥌 수 있어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았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플래카드가 붙는 것은 당연하고 농촌에선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곳도 있었다. 사법시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힘을 통과했다. 법무부는 합격생 가운데 4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로스쿨 검사에는 의사와 기자, 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사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문직들이 검사로 임용된만큼 전문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로스쿨이던, 사법시험이던 변호사가 많

로스쿨 검사



도 '힘없고 뺨없는' 사람에게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힘없고 뺨없는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통과할 때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생 100명 시대를 거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까지 등장하면서 사법시험 선호도가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탄생했다. 최근 로스쿨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제1회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1665명 가운데 1451명이 합격해 법조인의 자격을 얻었다. 전남대 로스쿨에서도 98명이 응시해 91%인 87명이 시

아저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입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로스쿨이 상류층 자제들에게 일 자리를 터주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시험 대신 3년에 6000만 원 하는 등록금을 내고 졸업하면 법조인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생 딸을 둔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는 "사법연수원생 부모들은 공무원 등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로스쿨 출신 부모들은 상류층이 많다"고 씁쓸해 했다. 로스쿨 검사 탄생 배경에 있는 명암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